

9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35.93	↑ 코스닥	714.46
	(-8.35)		(+7.87)
↑ 금리 (연이자율)	2.897	↑ 환율 (원/달러)	1347.25
	(+0.016)		(+19.65)

## 당국 제재 사정권... 중징계 불명예 보다 자진사퇴 가능성

### 흔들리는 100년 은행

#### ② 임종통 회장 거취는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태에 금감원 압박·중징계 무게  
손 전 회장 사례와 비슷해 임 회장 이달 중 결정될 듯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로 금융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임종통 현 회장에 대한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종통 회장이 취임한 지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부당대출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했거나 발견 이후 금융당국 보고가 늦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고강도 감사에 들어갔고, 감사 결과 임 회장이 부당대출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책임을 져야한다고 경고를 날린 상황이다. 부당대출 사태 해결은 우리금융의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향후 임 회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 ◆ 자진사퇴 가능성은?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에 대한 금감원의 압박 강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내년 예정된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 검사도 다음 달 초로 앞당겼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우리금융을 향한



임종통 우리금융 회장. /우리금융

비판을 공식적으로 세차레 언급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0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우리은행 부당대출 건은 제왕적 권한을 가진 전직 회장(손태승)의 친인척에게 수백억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해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안으로, 은행 내부시스템을 통해 사전적으로 인지했어야 한다”며 “너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질타했다.

이후 25일에는 “우리은행은 지난 1~3월 자체 감사, 4월 자체 징계 과정에서 8월 9일 수사 기관 고소 내용에 적시된 범죄 혐의 및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부당대출 건이) 제때 보고가 안 된 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지난 4일에는 “현 경영진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이사회와 주주의 몫”이라며 이사회에 향후 경영진 거취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 “이번 사안은 여신심사 부실에 해당하므로 보고할 의무가 없다”며 “(손 전 회장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절차상 회장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임 회장은 공식적으로 두 번이나 “송구스럽고,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르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임 회장이 추석 전·후로 부당대출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전면에서 나서면서 대통령실과 교감이었다는 추측도 나온다.

이번 사태로 임 회장은 올 국정감사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대통령실의 관심, 대형 인수·합병(M&A) 승인 여부, 검찰 수사 방향성 전개 등의 눈치를 봐야되기 때문에 임 회장의 입지는 좁아진 상황이다.

또한 검사결과에 따라 경영진의 중징계 가능성도 높기 때문

에 불명예 꼬리표보다는 자진사퇴가 우리금융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임종통 회장 성격이 남 눈치 보지 않고 주어진 일을 하는 성격이다 보니 현재 노출을 최소화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사안이 심각해지고 금융당국이 자진사퇴 기회를 주고 있는 만큼 어떤 결정이든 이달 중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 ◆ 사퇴 압박... 손 전 회장과 데자뷰

현재 임 회장을 향한 금감원의 기조는 지난 손태승 전 회장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금감원이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 전 회장의 연임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면서 결국 손 회장은 지난 1월 연임을 포기하고 용퇴를 결정했다.

라임펀드 사태는 한국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1조6700억원 상당의 펀드에 대해 환매 중단을 선언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다. 펀드 판매 청구 중 하나였던 우리은행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손 전회장은 중징계를 받았다.

(2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메트로경제 '2024 물류·모빌리티 포럼'

#### AI 시대, 지능화된 물류의 흐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물류·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흐름(flow)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자율주행 등의 미래 기술이 더욱 발전하며 그 흐름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찾아온 글로벌 경기침체는 물류와 모빌리티에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과 물건을 더욱 빠르고 저렴하고 또 안전하게 이동시키느냐가 풀어야 할 숙제이자 최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2024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서 그 인사이트를 드립니다.

- ◆ 주 제 : AI시대 FLOW전략  
이동의 한 순간, 물류의 매 흐름
- ◆ 일 시 : 2024년 9월 25일 오후 2시~5시
-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 등 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 문 의 : 2024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강 연 : 김태영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학과장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  
차두원 소네트 대표  
김준환 스트라드비전 대표



## 티메프 등 중개거래 플랫폼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율

### 공정거래법·유통업법 개정

시장점유율 60% 이상 플랫폼 4대 반경쟁행위 금지 추진  
중개거래액 1000억대 플랫폼 판매대금 정산주기 등 의무화

정부가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온라인 플랫폼의 반경쟁행위 규제를 보다 강화한다. 과징금 상한을 올리고, 반경쟁행위 신속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도 도입한다.

최근 '정산 불능' 사태를 야기한 티메프(티몬·위메프) 등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대규모유통업자로 분류해 정산 주기·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을 의무화한다. <관련기사 3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9

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점유율 60% 이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연간 중개거래액 기준 최소 1000억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율해 정산주기 등을 의무화한 게 골자다.

한 위원장은 “정부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적극적 법 집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응해 왔다”며 “그러나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경쟁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

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최종 정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실서 회복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을사업자에 대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해 국회와 법안발의를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다.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은 공정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박태홍 기자 hys@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대통령실, 여야 의료계 논의 촉구해 “전적으로 동의·지지” /사진 뉴스스
- ▲ 윤·여 최고위원 일부 관저만찬… “정치권 등 자주 만나”

- ▲ 윤 지지율 29.9%, 부정평가 66.1%… 4주 만에 하락세 멈춰 /사진 뉴스스
- ▲ 조국 “윤, 전 정권 탓만 해… 김건희는 대통령 형세”



- ▲ 법사위 1소위,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전체회의 넘겨… 여 반발 ‘되장’ /사진 뉴스스
- ▲ 이재명 “시로 특정 소수 혜택보고 다수 배제… 격차 해소 고민해야”